



광주 5/14°C 목포 7/13°C 여수 8/14°C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문의 (062)227-9600

光州日報

kwangju.co.kr

2013학년도 수시2차 모집
원서접수 : 2012.10.16(화) ~ 11. 29(목)
고구려대학교
입학상담 : 080-330-7300
단기 4345년 (음력 9월 17일)

제19349호 1판 2012년 10월 31일 수요일

새누리, 예산으로 진정성 보여라

내일부터 국회심의…지역현안 국비반영 노력

박근혜 '선거용 호남구애' 불신 해소시켜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비롯한 지도부가 '불모지' 호남 공략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지역민들은 그 진정성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되풀이해온 여당의 '호남 민심 깨안기' 선거 전략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예산 국회에서 광주·전남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는 지지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은 현재 박근혜 대선 후보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국민대통합'이라는 구호 아래 상대적으로 당에서 소외됐던 '호남 민심'을 깨안기 위해 각별한 애정을 숨으며 공을 들이고 있다.

황우여 대표가 광주시당으로 대표실까지 옮겨 지역 민심을 직접 살피

고 있고, 박근혜 대선 후보는 호남지역 인재 등용과 함께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그동안 민주당 '덕발'이었던 호남의 민심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다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이 곳에서 20%대 지역율을 얻게 될 경우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도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지역 현안사업 중 내년 국비지원 요청사업에서 삭감된 예산이 상당수에서 새누리당의 '호남 구애'가 과거처럼 진정성 없는 '선거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가 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국비지원 요청사업 중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비용은 1610억원 중 1000억원 만 반영됐으며, 문화산업의 기초가 될 CT연구원 건립비 지원도 70

억원을 요청했지만, 절반 이상이 꺽인 30억원만 예산에 반영됐다. 또한, 클린 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육성 사업 국비 예산도 390억원 요청액 중 260억원이 삭감됐다.

전남도 역시 내년 F1 코리아 그랑프리 운행비 800억원 중 30%인 240억원을 정부에 지원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돼 국회에 국비 지원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부도 국비 지원 요청액(71억원)의 10%인 7억원만 반영됐고, 여수 엑스포와 서

남해안관광레저도시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도 77호선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비 2700억원 중 720억원만 반영되고, 1980억원이 삭감됐다.

박 후보가 광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문화복합산업단지 조성,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육성, F1 대회, 남해안발전 등의 주요 지역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이 정부 부처에 의해 대규모로 삭감된 것이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약속한 대선 공약사업 상당수가 내년 국비 예산부터 줄줄이 삭감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호남 소외'가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17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광주·전남지역 대선 공약 29개(광주 12개·전남 17개) 가운데 완료된 공약사업은 단 한 건도 없고, 9개(33.3%) 공약은 이에 속해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광주·전남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예산 국회에서 정부에 의해 삭감된 광주·전남지역 국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선·총선 때만 되면 각 정당이 광주와 전남에 앞다퉈 구애를 하지만, 공약 실현률은 극히 저조하다"며 "요란스러운 구애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을 국회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게 지역 민심을 얻는 길"이라고 말했다.

/최권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은행 바른선거 실천 서약

광주은행은 30일 광주 대인동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른 선거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광주 동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선과 동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정책선언과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벌이는 '릴레이 캠페인' 일환으로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군 양민학살 첫 국가배상 판결

전남지역 173명 소송…“21억원 지급하라” 승소

한국전쟁 초기 국군에 의해 학살당한 전남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이 사건 발생 59년 만인 2009년에야 이뤄진 만큼 '손해 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이우재 부장판사)는 임모씨 등 1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국군의 양민학살 발생 60여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당시 군인들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혐의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고, 희생자와 유족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한국전쟁 중인 지난 1950년 10월부터 1951년 3월 사이에 담양·장성·화순·영광·함평군 등에서 수

복 및 빨치산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11사단에 의해 주민 291여명이 빨치산이나 부역혐의자 등으로 몰려 사살되거나 연행된 후 행방불명됐다.

이후 173명이 지난 2007년 2월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지난 2009년 3월 16일 "국가기관인 국군이 적법절차 없이 비무장·무장한 상태의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현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는 결정통보를 받았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연합뉴스

비교할수록 <토요타>

토요타 광주전시장 OPEN 이제 광주에서 비교해 주세요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36개월 무이자 할부

광주전시장 062-371-8383



우암학원 장학 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아시아 생활문화 사진 展

아시아, 여기는 0.00km

11. 2(금) - 12. 21(금)

장소 아시아문화마루

구. 전남도청 분수대 옆

Opening : 11월 6일(화) Pm.4시 박종우 사진작가의 '차마고도' 다큐강연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Gwangju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주관 아트 앤 앱 APCEIU

후원

©성남훈

©볼즈로프 에르킨백

©정용일

©트란 비엣 아잉

문의 062)236-0481